

법과 정치

1. ④	2. ③	3. ⑤	4. ①	5. ③
6. ①	7. ④	8. ③	9. ①	10. ④
11. ②	12. ③	13. ⑤	14. ③	15. ②
16. ④	17. ④	18. ④	19. ③	20. ④

1. 정치의 의미에 대하여 갑은 집단 현상설, 을은 국가 현상설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있다. 나. 국가 현상설에 따르면 정치는 국가 권력의 획득 및 행사 등과 관련된 고유한 활동이므로 국가 성립 이전에 나타나지 않는다. 다. 국민이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정치권력의 형성과 관련된 활동이면서 동시에 국가라는 집단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활동이므로 국가 현상설, 집단 현상설 모두의 입장에서 정치에 해당한다.
- 나. 집단 현상설에 따르면 학교와 같은 비교적 작은 집단에서도 정치가 나타난다고 본다. 다. 정치가 사회적 회소 가치의 배분과 관련된 활동이라고 보는 것은 국가 현상설과 집단 현상설의 공통점이다.
2. ③ 을국은 실질적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이지만 병국은 형식적 법치주의가 나타나는 국가이다. 따라서 위헌 법률 심판 제도는 병국보다 을국에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 ① 갑국은 합법적 절차를 통해 제정된 법에 따라 통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통치의 정당성보다 합법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병국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제정된 법에 따라 통치하므로 인치주의가 나타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될 수 없다. ④ 통치의 정당성을 위해 을국은 통치의 과정과 결과 모두를 중시하며, 병국은 통치의 과정만 중시한다. ⑤ 갑국에서 형식적 법치주의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3. ⑤ 모든 민주 정치 체제는 치자와 피치자의 일치(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가 분리되지 않는다는 원칙)를 추구한다. 다만 치자와 피치자의 일치를 실현하는 방식은 간접 민주 정치 체제와 직접 민주 정치 체제가 서로 다르다.
- ① 대의 정치 체제, 즉 간접 민주 정치 체제를 바탕으로 하는 것은 근대 민주 정치와 현대 민주 정치의 공통점이므로 (㉠)에 들어갈 수 있다. ② 고대 아테네의 민주 정치는 직접 민주 정치에 해당하므로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선출하지 않았다. 공직자는 시민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윤번제와 추첨제에 의해 임명되었다. ③ 제한적인 민주 정치 체제라는 것은 고대 아테네의 민주 정치와 근대 민주 정치의 공통점이므로 (㉡)에 들어갈 수 있다. ④ 보통 선거 제도는 현대 민주 정치의 특징이므로 (㉢)에 들어갈 수 있다.
4. 제시된 글은 로크의 주장이다. ① 로크는 주권이 입법권과 사법권이 포함된 행정권으로 분리될 수 있으며, 국가에 주권을 위임함으로써 자연 상태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고 국민이 천부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
- ② 로크는 간접 민주 정치, 루소는 직접 민주 정치를 이상적인 정치 체제로 보았다. ③, ⑤ 홉스의 주장이다. ④ 사회 계약설은 인간이 국가 수립 이전인 자연 상태에서 천부 인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국가 수립을 통해 효과적으로 천부 인권을 보장하고자 한 사상이다.
5. 갑국의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이다. 다. 대통령제에서는 행정부 수반이 의회가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공포를 거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으로써 의회를 견제할 수 있다. 나. 대통령제에서는 의회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권을 가짐으로써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다.
- 나. 대통령제에서는 엄격한 권력 분립을 지향하기 때문에 행정부는 의회 의원의 권한인 법률안 제출권을 가질 수 없다. 다. 대통령제에서는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일치한다.
6. ① 제1조는 대표자를 통해 주권을 행사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주권 행사를 제한하는 문제점이 있으나 국민 주

- 권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 ②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자유 민주주의의 원리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 ③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가 통합 위원회 대의원들이 국회의원 중 1/3을 선출하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국회의 대통령에 대한 견제가 약화될 수 있다. ④ 국민의 대표를 국민이 선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국민 주권의 원리를 훼손하는 것이다. ⑤ 국가 통합 위원회를 통해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것은 국민의 의사가 대표자 선출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지 못하므로 직접 선거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7. A는 사회권, B는 청구권이다. ④ 청구권은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 그 구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이다.
- ① 사회권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권리만을 보장하는 열거적 권리에 해당한다. ② 사회권은 현대 복지 국가에서 강조되는 권리이다. ③ 청구권은 적극적 권리에 해당한다. ⑤ 역사적으로 보면 기본권의 발달 과정에서 청구권이 사회권보다 먼저 등장하였다.
8. A는 국회, B는 대통령, C는 법원, D는 헌법 재판소이다. ③ 대통령은 법률안에 대해서는 재의 요구권이 있으나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재의 요구권이 없다.
- ① 조약 체결 및 비준에 대한 권한은 모두 대통령에게 있다. 국회는 조약의 체결 및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 ② 대통령은 임시회 집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법원은 명령의 헌법 위반 여부와 법률 위반 여부 모두 심사할 수 있다.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사권은 헌법 재판소가 갖는다. ⑤ 법원의 구성원인 법관, 헌법 재판소의 구성원인 헌법 재판관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으므로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 대통령과 국회 구성원인 국회의원(국회의장 제외)은 정당에 가입할 수 있다.
9. 갑국의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이다. 나. T대 의회에서 D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율은 비례 대표 의석 점유율을 통해 추정할 수 있다. D당의 비례 대표 의석 점유율은 10/60이지만, D당의 의석 점유율은 30/300이므로 D당은 T대 의회에서 국민의 의사를 과소 대표하고 있다. 다. 과반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없는 T+1대 의회에서는 연립 내각 구성의 필요성이 발생하였다.
- 다. 선거구 수는 지역구 240개와 전국구 1개이다. 나. C당의 의석수는 T대와 T+1대 의회에서 같지만 T+1대 의회에서는 과반수 정당이 없기 때문에 C당이 법률안 의결 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10. ④ 정당은 자신이 추진한 정책 등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지만, 시민 단체는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① 정당과 시민 단체 모두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활동한다. ② 정당은 공식 선거에 후보자를 공천할 수 있다. ③ 정치적 중립성이 강조되는 것은 시민 단체이다. 정당은 각자의 정치적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활동한다. ⑤ 정당과 시민 단체 모두 정책 결정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 비공식적 참여자이다.
11. 재판부는 갑과 소송사가 체결한 계약 내용이 갑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판결하였다. 이와 같이 계약 내용이 공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 공정의 원칙에 따라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12. 나. 취소 불가 조항이 있더라도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체결한 계약은 미성년자 본인이나 부모가 취소할 수 있다. 다. 미성년자가 거래 상대방에게 속임수를 써서 자신을 성년자로 믿게 하였을 경우에는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취소권이 배제된다.
- 나. 거래 당시 미성년자임을 몰랐을 경우에만 거래 상대방에게 철회권이 인정된다. 나. 병과 정이 체결한 계약은 병의 부모가 계약을 승인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한다.
13. 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 비속, 직계 존

- 속, 형제자매에게만 인정된다.
- ①, ② ㉠, ㉡은 협의 이혼과 관련된 내용이다. 협의 이혼은 원칙적으로 이혼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할 수 있고, 이혼 신고를 해야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은 재판상 이혼과 관련된 내용이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 ④ 상속 포기할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 모두 승계되지 않는다.
14. 나. 가압류, 가처분 등과 같이 소유권과 관련된 사항은 등기부 갑구에 기재된다. 나.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이 면제되면 공작물 소유자가 무과실 책임을 진다.
- 나. 내용 증명 우편은 우편에 기재된 내용을 발송하였다는 사실만을 증명한다. 즉, 우편을 발송한 사람의 주장이 그대로 사실로 확정되지는 않는다. 다. ㉣은 손해 배상을 받기 위한 민사 소송이다. 범죄의 성립 여부는 형사 소송에서 심리한다.
15. 나. 갑은 B의 선순위 권리자이지만, 을은 B의 후순위 권리자이다. 나. 갑과 을은 대항 요건을 갖추었지만, 병은 그렇지 않다. 따라서 갑, 을은 병과 달리 남은 계약 기간 임차한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다.
- 다. 대항 요건을 갖춘 을 역시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다. 입주와 전입 신고를 하고 확정 일자를 받았다고 해서 등기부에 기재되는 것은 아니다.
16. ④ 을의 변호인은 을이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범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신 미약자의 행위는 책임이 감경되는 사유이다.
- ①, ② (㉡)에서는 갑의 행위가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③ (㉢)에서는 을의 책임이 감경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⑤ 심신 미약자의 행위는 책임 조각 사유가 아니라 책임 감경 사유에 해당한다.
17. ④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지만, 갑이 상고하여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갑에 대한 유죄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갑은 현재 무죄로 추정된다.
- ① 기소된 이후에는 구속 적부심을 청구할 수 없다. ② 무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 보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집행 유예는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에 내려지는 선고이다. ⑤ ㉤은 항소, ㉥은 상고이다.
18. ④ 초심은 갑이 신청하였고, 재심은 초심에서 패소한 회사 측에서 신청하였다.
- ① 부당 해고 구제에 대한 재심은 중앙 노동 위원회에서 담당한다. ② 부당 노동 행위는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중앙 노동 위원회의 재심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행정 소송이다. ⑤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은 민사 소송으로 노동 위원회의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제기할 수 있다.
19. 병. ㉣의 신설은 고액의 벌금형이 선고된 사람의 지나치게 높은 1일 탐감 금액을 줄여 국가 형벌 체계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안이다. 정. 벌금은 5만 원 이상의 재산형이고, 과료는 2천 원 이상 5만 원 미만의 재산형이다. 따라서 ㉣은 고액의 벌금을 납입하는 것보다 노역장 유치가 유리해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고의로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사람을 줄이고자 한다.
- 갑. 재산형 중 몰수형에 대한 노역장 유치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을.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 교도소에 수감하는 형벌이지만, 노역을 부과하지는 않는다.
20. A는 안전 보장 이사회, B는 국제 사법 재판소이다. ④ 안전 보장 이사회의 비상임 이사국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① 상임 이사국에게 거부권이 주어지는 안전 보장 이사회의 의사 결정 방식에는 힘의 논리가 반영되어 있다. ② 국제 사법 재판소는 강제적 관할권이 없어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분쟁 당사국 간 합의가 있어야 한다. ③ 국제 사법 재판소의 재판관은 총회 및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⑤ 국제 관습법은 국제 사법 재판소가 적용할 수 있는 국제법의 법원(法源)이다.